

외국인발 코로나 확산...광주시 행정명령 발동

외국인 고용 사업장 10일까지 검사 지난달 확진자 677명 중 123명 발생 가족·지인모임 병원 등 산발적 감염

광주지역 코로나19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677명 중 외국인은 12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이다. 외국인 17명, 북구 지인 모임 3명, 광산구 의료기관 1명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타 시도 방문·접촉, 기존 확진자 관련도 10명이 발생했다. 유증상 검사자는 1명이다.

지난 1일에는 42명이 확진됐다. 올해 두번째로 많은 수이다.

광주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외국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간 모임, 학교, 병원, 주점 등에서 산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한 물류센터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종사자 120명이 진단 검사를 받고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 9명이 확진됐다. 광산구 초등학교 2곳의 재학생도 가족 간 감염으로 확진된 학생, 교

직원 등 147명이 검사를 받고 일부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전남에서는 순천 부부동반 모임과 나주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총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전남 2,618~2,639번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순천 7명, 나주 5명, 여수 3명, 담양 2명, 목포·무안·영광·화순·장흥 각 1명씩이다. 전남 2,618~2,620번은 순천 일가족 확진자였다.

나주 확진자 3명(2,623~2,625번) 중 1명(2,624번)은 광주 물류센터 종사자로 확인됐다.

무안(2,627번)·여수(2,630번)·영광(2,622번) 등 확진자 3명은 각각 광주·충남·구리를 방문한 뒤 가족 또는 지인과 접촉해 감염됐다.

광주시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 기간은 3일부터 10일까지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을 1명 이상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시장에서 상인,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관계자 등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장 곳곳을 소독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검사 대상은 외국인과 함께 근무하는 내국인도 포함된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는 광주지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등록외국인은 2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1만1,000여 명이 광산구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까지 6,000여 명이 검사를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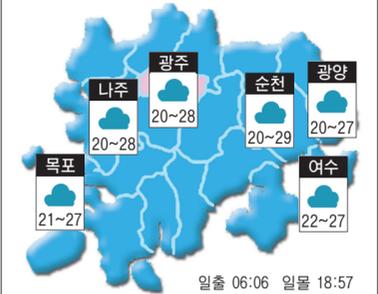
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지역 확진자 677명 중 123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돼 18.4%를 차지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다"며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애란·길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0~28	흑산도	22~26
담양	20~29	구례	20~29
화순	29~28	곡성	20~29
영광	29~28	완도	22~28
함평	29~28	강진	21~29
무안	20~27	장흥	20~28
영암	20~28	해남	20~28
진도	21~27	고흥	20~27
신안	20~28	보성	20~27

목포	만조 10:54 간조 05:35 16:59	여수	만조 06:44 19:25 간조 01:15 12:42
----	----------------------------	----	----------------------------------

문: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주정차 과태료 청탁' 서구 압수수색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직원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광주 서구청 교통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정차 과태료 면제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광주시 검사와 서구청 자체 조사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청탁과 관련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구청 일부 공직자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주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청탁을 주고받은 공무원 5명과 공무원 12명 등 17명을 부정부당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선우 기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획 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 및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기획전시실에서 '이 사람을 보라' 세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하반기 기획전시로 마련한 '이 사람을 보라'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겨진 인물을 발굴해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로 경찰, 사진기자가 이어 여성 역사를 중심으로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한다.

전시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박근희 열사와 박현숙 열사에 주목하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비춰진 여성 열사의 활동 등을 다뤘다. /황애란 기자

유흥주점 심야 불법 영업 133명 적발

3,575개소 점검...내달까지 단속 기간 연장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지역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2건, 133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시경찰청 및 경찰서 질서계와 경찰관기동대를 포함 총 2,269명 인원을 투입해 유흥시설 3,575개소를 점검했다. 방역수칙위반으로 83명(8건)과 불법행위 50명(24건)을 적발했다.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경찰서 점검반 외에도 경찰관기동대 인력 다수를 투입해 가시적 순찰을 진행,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했다.

주요 단속사태는 지난달 24일 광산점

단지구에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홀덱업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다. 7월27일에는 상무지구 거리에서 손님을 호객행위로 유인해 영업을 금지된 시간에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8명을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4차 유행의 중대한 번복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 단속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 "정부의 방역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5·18조사위, 대면조사 서한문 발송

전두환·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 등 대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지난 1일 전두환씨와 당시 신군부 주요인물 등 5인에 대해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5·18조사위는 서한문 발송 이유에 대해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표 명령자의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현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이에 대해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실제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이들 중

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18조사위가 선정된 우선 1차 조사 대상자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수사령관 정호용 등 5인이다.

이들은 조사가 시급한 고령자들로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5·18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송선태 위원장은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캐노피 1만원)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
(광주터미널) 전시중!